

누구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인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

미국의 법률회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 자문단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세계은행이 제공한 빛으로 용역을 준 결과다. 이에 대해 제계는 “한국이 무슨 기업지배구조 이론의 실험장인가”라고 항변을 토한다.

‘주주 자본주의’ 확립이 논의의 출발점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그리고 미래경영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심포지엄의 결과물을 엮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이 선 외 엮음, 미래경영개발연구원)는 이 와중에 출간됐다. 시의적절성으로 보나 16인 저자들과 편자 네명의 명성으로 보나 이 책이 향후 관련 연구의 중요한 참고문헌에 속하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업의 경영권을 누가 가지며,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경영권 행사를 어떻게 감시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대체로 다 챙겨 넣은 편자들의 수고도 그 값을 다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공저가 그렇듯이 각 집필자의 개성과 관점의 차이가 각 글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책도 하나의 잣대로 단칼에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모든 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인식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이념적 목표 즉, ‘주주 자본주의’의 확립을 모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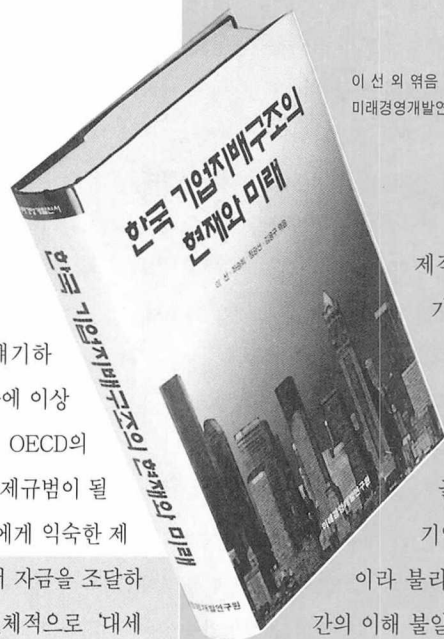
그러나 그 출발점 자체, 다시 말해 왜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체 분량에 비해 상당히 부실한데, 이 점은 책 곳곳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일본 및 독일 등의 경우처럼 주주 자본주의와는 다른 지배구조에 대한 장단점이 소개되기도 하고, 많은 논자들이 각 국가의 역사에 뿌리를 둔 제도의 속성상

어떤 지배구조가 우월한가를 얘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다. 애써 근거를 찾자면 OECD의 지침이 앞으로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국제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제도를 도입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도다. 전체적으로 ‘대세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세에 따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대세라는 것을 통해 암묵적으로 자본주의와 기업, 그리고 거기에 내재해 있는 권력관계,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특정한 이해방식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책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배구조는 곧 권력의 문제다. 그런데 저자들이 따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권력에 참여하는 주체가 주주, 경영인, 그리고 채권자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간의 견제와 균형이 곧 경제민주주의의 내용이다. ‘주주에 의한, 주주를 위한, 주주의 기업지배’가 한국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원칙으로 표방된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유한다면 주주가 곧 국민이요, 경영진은 행정부, 이사회는 입법부가 될 것이다.

노동자의 기업권력 참여 배제해

여기서 자본주의의 태동기에 소유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정치적 투표권을 누렸던 좋은 시절(당연히 1인 1표라는 오늘날의 대중 민주주의 원칙과 1원 혹은 1주 1표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원칙간의 갈등은 없었다)을 기업 내부에서나마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아주 깊숙한 곳에서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자산소유자들과 그들의 대리인간의 민주적 권력 분점을 경제민주주의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을 기업 내 권력구조에서 배제하고, 이를 경



이 선 외 엮음
미래경영개발연구원/A5신/684면/28,000원

제적 효율성이나 기업 가치 극대화의 원칙으로 적절히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억지스런 글 읽기일까?

기업지배이론의 핵심이라 불리는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 불일치 문제는 곧 지주

와 마음의 관계인 것이니, 지주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일반인들이야 지주와 마음이 민주적 관계를 맺든 말든 별로 관계할 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감원 결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노동자나 공장 이전계획에 따라 폐쇄될 수도 있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기업권력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비록 개념이 불분명한 지식 노동자에 한정했지만, 주주 이외에도 노동자가 기업권력구조에 참여할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던 정명호의 논문이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책이 추구했던 또 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특정 상황을 담을 수 있는 지배구조의 모색이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달성되지 못했으며, 주주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한 앞으로도 쉽게 달성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한때 기적이라 일컫던 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민주화 과정에 주주가 기여한 바가 그리 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여에 비례한 권리를 내내 강조하면서 왜 주주에게는 역사적 기여에 걸맞지 않는 권력을 주려고 애쓰는지 모를 일이다.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저서 《한국경제론》 《신경제학과 한국 경제의 미래》(공저) 외.